

최저가 대안 ‘중심제’ 불만확대 왜?

– 대기업 독점우려, 중견업체 수주기회 박탈, 공평한 입찰참여 · 경쟁 통한 수주기회 보장돼야 –



김덕수
한국건설신문 기자

종합심사낙찰제 확대를 앞두고 특정 대기업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견·중소건설업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중견중소업체는 정부가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대안으로 도입한 ‘중심제’가 특정 대기업의 독과점 및 담합 등을 유인한다면서 중심제 개선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628개 건설사는 ‘중심제 운용기준에 대한 건설업체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LH 공사 등 23개 기관에 제출했다. 건의서는 “LH공사, 철도공단,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등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발주하고, 입찰을 진행하면서 건설회사들이 학습고대하던 공정경쟁을 통한 품질확보와 중소기업업체 동반성장이라는 염원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

존 PQ 통과업체들이 공사수행능력 중 시공실적 조정계수에 의해 시공실적 평가항목에서의 불이익, PQ 최소 실적인정기준 이상의 과도한 실적제한 등으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동안 시범발주를 통한 종합심사낙찰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사수행능력 점수만으로 낙찰자가 결정되는 구조이며, 특히 조정계수를 통한 시공실적에 대한 인위적인 점수조정은 특정업체에게 직접적인 특혜를 주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중심제의 가장 큰 우려사항은 입찰금액에 대한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수행능력점수가 낙찰자 결정에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이다. 입찰가격은 균형가격부터 균형가격 -3% 사이의 투찰이 집중될 것이 자명하므로 시공실적의 변별력을 지나치게 평가한다면 시공경험이 풍부한 일부

건설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된다. 심사기준의 수정없이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향후 일부 대형회사만이 지속적인 실적 및 수주확보가 가능하게 돼 중견·중소업체들의 수주난으로 인한 연쇄 부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매출액 비중 심사 시 해외기성실적을 인정하지 않고 국내 기성실적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시공전문성을 평가하려한 도입 취지와 맞지 않고, 국제입찰대상공사임에도 국내기성실적이 없어 수주기회 자체를 박탈당한 외국계 건설업체들의 WTO 정부조달협정 위반에 따른 제소가 우려되고 있다.

중견·중소건설업체는 건의서를 통해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이미 낙찰자가 정해지는 입찰구조와 수주독점을 막기 위해서 현행 PQ기준 통과 업체수와 비슷한 수준의 공사수행능력 만점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중소건설업체는 “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시행한다면 사회적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토로하고 있는 가운데 중심제 도입 및 확대를 둘러싸고 갈등이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와 관련 건설업계가 불만을 터트리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중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심사에서 점수를 손해보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종합심사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동반성장 정책과 정면으로 반하며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구조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비슷한 규모의 최저가낙찰제공사와 종합심사낙찰제공사를 비교

했을 때 최저가낙찰제공사 ‘울산신항 인입철도 노반 건설공사’의 경우 100위(중소업체)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은 18.7%(50개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종합심사제 ‘동해선 포항~삼척 철도건설 제11공구 노반건설공사’의 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은 4.4%(4개사)로 중소건설업체의 철도분야 공공 참여시장이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소건설업체는 실적확보의 어려움으로 공공 철도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보여져 이는 박근혜정부의 정책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찰제도”라고 토론했다. 현재, 종합심사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철도시설공단, LH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의 종합심사낙찰제 특례 운영기준에는 공동수급제 심사 시 시공비율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에 실적과 시공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업체들과 공동도급하는 것은 단독으로 입찰 참가하는 것보다 불리하게 된다.

국회는 최저가낙찰제의 폐해를 인지하고 문제점과 그 대안을 제시하라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저가낙찰제의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를 내놓았는데 건설업계의 불만이 확대되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아니러니하다.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입찰참여 제한, 낙찰률 하락이라는 결과를 보였으니 누구를 위해 제도를 만든 것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밖에 없다. 그동안 기재부 및 국토부 국·과장급 실무자들의 인사 이동이 2~3차례 실시돼 정책 담당자 중에 전문가들이 없다는 후문이 적지 않게 들리고 있다. 건설업계의 불만을 정부는 얼마나 귀담아 들었는가? 정부는 중심제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비아냥 섞인 지적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건설업계의 의견수렴이 절실한 때이다. 